

한일관계의 교훈

최근 일본정부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와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으로 이어지는 독도 도발은 앞으로 독도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울릉도 방문을 계획한 의원들은 일본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한일관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까지 감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다.

울릉도 방문 의원들은 ‘간담화’의 후속조치로 한국에 문화재 반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장관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독도가 점차 한국의 영토로 자연스럽게 굳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이러한 계획을 실시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들의 이번 행동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음모와 함께 자신들의 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알팍한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것이다. 문제는 그 어디에도 자신들의 행동이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없다는데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일본의원들의 개인적인 자질 문제보다는 일본정치의 흐름에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탈냉전이후 일본은 새로운 국가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과거사의 반성과 사죄를 통해 아시아와의 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롭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일본 우익들의 위기감과 반발은 장기불황에 힘들어 하는 일본국민들에 파고들어 내셔널리즘을 자극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이후 2010년의 ‘간담화’로 이어지는 과거사에 대한 적극적인 화해의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 한편에서는 아베 총리의 ‘주장하는 외교’로 대표되듯이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할말은 하겠다’는 과거지향적 우익들의 반발 또한 커지는 기묘한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에는 일본 정치내의 사회당의 몰락, 그리고 세대교체

진 창 수

- (前) 세종연구소 부소장(겸임)
- (現)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센터장



로 인해 과거지향적인 우익들의 목소리가 정치권내의 상식으로 굳어져 감으로써 한국이 도덕적인 우위를 통해 일본을 몰아치는 모습은 벌써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이러한 일본정치의 흐름으로 인해 이번 사건은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순탄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다. 우선 국내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의 정치권의 독도에 대한 ‘국민반응’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과거사문제는 한국의 적극적(감정적인) 대응과 일본의 소극적인(냉담한) 반응으로 갈등을 확대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야당 자민당이 정략적으로 일본 민주당 정권을 몰아세우면서 독도 갈등이 촉발된 것이다. 결국 일본의 ‘상처받은 내셔널리즘(wounded nationalism)’으로 인한 일본 국내 정치의 갈등이 한일 관계를 해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특히 한일 양국의 국민들 사이에 ‘파트너적인 우호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이 갈등을 만드는 기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둘째 일본 정치권내에서 한국의 전략적인 가치를 인정하면서 한일 갈등을 축소하려는 매카니즘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민주당 정권의 탄생은 한일 협조를 중시하는 유력정치인(예를 들면 하토야마 총리, 센코쿠 관방장관 등)이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정국은 간 총리의 퇴진을 염두에 둔 권력 투쟁이 심화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외교에서 우파들의 목소리가 더욱 더 커진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셔널리즘을 부추기는 정치가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정치권은 ‘한국과 전략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정치가는 없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릴 정도로 경직된 흐름이 존재한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일깨워 준 교훈은 **첫째** 우익의 목소리가 일본 정계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은 한국내 관심이 일본에 역으로 영향을 미쳐 우익들이 바라는 대로 한일간의 이슈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를 일어난 일본 의원들 중에는 ‘나의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의미를 부여 해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들의 음모대로 한국의 중요 정치가들이 앞서서 발언을 하면서 이번 사태는 중요한 뉴스거리가 되었다. 앞으로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본의 독도 도발을 생각할 때 이처럼 우리가 나서서 문제를 키울 필요는 없다. 일본의 정치가나 민간들이 하는 행동에까지 일일이 대응을 한다면 일본 우익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한일 양국은 국익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아직도 일본내에는 독도문제를 통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이 단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기 위해 한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야말로 한일관계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즉 일본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거대시장의 확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적절한 균형정책 등은 일본의 국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따라서 합리적인 목소리가 일본 정치권내에서 커져야 하는 것은 일본 정치권이 고민해야 할 숙제이다. 또한 한국도 중국의 부상과 함께 일본의 전략적인 카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조치가 독도공고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재고해야 한다. 일본의 도발에 국민들은 가시적인 독도에 대한 조치를 가장 속 시원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정치권은 독도에 가시적인 조치를 앞다투어 내세우면서 정치적인 우위를 선점하려는 경쟁마저 있다. 물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치권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으로 독도를 지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하는 것은 일견 독도를 공고화하는 조치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에는 일본의 대응을 생각하면 오히려 군사분쟁화를 가져올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략적인 카드를 미리 사용하여 다음의 대응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번 사태는 한일 모두 장기적인 미래의 관점에서 독도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전략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